

살리기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마을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방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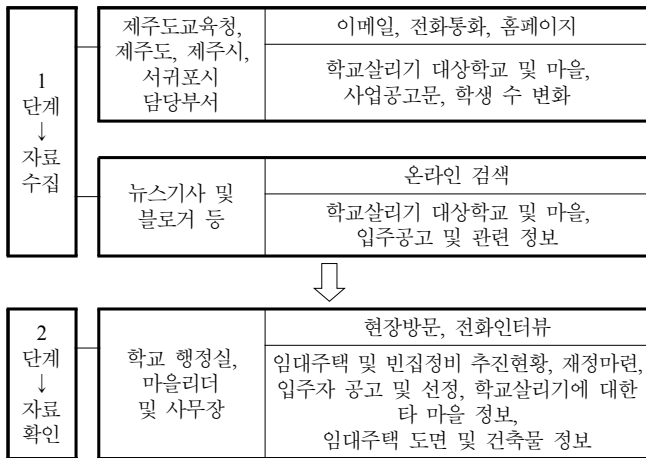


Fig. 1. Study method and data collection

학교 살리기운동은 제주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마을에서 시작하였고, 사업시행 이후에도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관련행정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차이가 발생하여²⁾ 해당마을의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었다.

1단계에서의 자료수집은 행정기관, 언론보도,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료내용은 학교살리기를 위해 마을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를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정보,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각종 공고와 사업신청공고문, 학생 수 변화 등이다.

2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마을과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직접대면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학교 살리기운동을 추진하는 마을의 리더들은 주변마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뷰과정에서 타 마을에 대한 정보요청도 이루어졌다. 자료내용은 마을 임대주택 및 빈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 및 공간확보, 입주자 선정 및 공고 방법 등과 같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과 임대주택과 관련한 세대 수 및 도면 등의 건축물 정보이다.

최종적으로 사업대상 학교는 총 30개교(동일부지에 존재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로 집계), 사업추진 마을은 36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 수 변화를 교육통계에서 확인하였다.

2. 학교살리기 관련연구 고찰

학교살리기 관련연구들은 교육행정 및 과정 등의 교육관련

2)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제주도의 사업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의 일환이다. 작은학교 살리기운동은 체험교실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기관의 관리목표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1982년 시작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권에서도 학력인구의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시켰다. 이 정책은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른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가 적용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의 존치 여부, 정책 및 통폐합의 당위성에 대한 논쟁 또한 가열시켰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과 학교의 연계라는 관점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및 행정적 측면에서의 정책이나 통폐합 논의는 제외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는 공공체라는 관점이 함축되어 있다. 이화룡³⁾은 학교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교육 서비스로서의 교육적 공공성과 공동이익을, 사회적 역할로서는 심미적 공공성과 공동체적이라는 4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도시, 지역개발, 농촌건축 분야에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진행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시설의 공동체적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둘째는 지역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관점에서 학교살리기 관련연구이다.

학교시설의 이용에 대한 연구는 학교 통폐합정책의 시행으로 폐교가 발생하면서, 폐교 이전과 이후의 시설활용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폐교 이전의 학교시설 이용은 주로 지역공공체로서의 학교건물, 시설, 공간 등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⁴⁾가 이루어졌다.

학교 통폐합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수의 폐교가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거나 공공체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유발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폐교재산의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과 같은 공공성의 목적을 갖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⁵⁾들이 진행되었다.

학교살리기와 관련된 연구는 학교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촌공동체 해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폐교위기를 극복한 학교사례와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노력⁶⁾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지

3) 이화룡, 학교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5(1), 2008, pp.26-33

4) 방택훈·김기환, 학교시설 다목적장당의 지역주민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3), 2006, pp.56-65
서희숙·이상홍,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현황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3), 2006, pp.6-16

김승제, 학교시설과 지역시설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복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4), 2006, pp.24-30

김승근·신주성, 공공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공원화 사업과 외부 공간조성,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17(4), 2010, pp.13-20

5) 변경화, 폐교를 활용한 체험활동 숙박시설의 공간계획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5), 2015, pp.111-119

6) 2001년 3월 폐교예정이었던 남한산초등학교가 성남지역 교육관련 시민운동가들의 활동으로 폐교위기 극복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2010년)’, 강원도교육청 ‘작은학교 희망만들기(2013)’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고 있다. 박계식⁷⁾과 임선빈⁸⁾은 폐교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지역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교육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관련하여 최중성⁹⁾은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화동¹⁰⁾은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주도 사례를 조사하여 임대주택 제공의 효과성을 논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학교’라는 교육시설과 함께 공존·공생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유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학교살리기를 실천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학교살리기를 위하여 제주도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을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현 시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3.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3.1 배경 및 추진과정

마을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위기를 지역인구 증가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을공동체의 노력이다. 이와 관련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학교살리기를 위해 마을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1992년 애월읍 납읍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 학생수가 300명을 초과하였던 납읍초등학교가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에는 98명으로 100명 미만이 되었으며 학급도 1학급이 감축된 5학급으로 전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1년에는 학생수가 80명 미만으로 예상되어, 1991학년도부터 「분교장 격하 대상학교」로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¹¹⁾

이에 따라, 납읍리에서 펼친 첫 번째 운동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외지에 거주하는 납읍리 출신인들에게 자녀와 함께 귀향(歸鄕)을 권유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6명의 학생이 전입하여 분교장 격하 대상에서 일시 유예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이농현상으로 이 방법으로는 한계를 인지하여, 마을에서 추진한 다음 방법은 초등학교가 있는 외지인들에게 바깥채 또는 빈집을 마을 자금 3천여 만원(가구당 평균 3백만원)으로 수리하여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살리기에 한계를 인식한 마을주민들은 1997년 처음으로 마을 공동임대주택을 건립하게 이르렀다.¹²⁾ 공동임대주택

건립비용은 납읍리 마을공동재산 매각, 모금, 출향민들의 지원 등을 통해 마을자체에서 마련되기도 하였지만, 제주도와 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납읍리의 이러한 노력은 제주도 내의 학교살리기운동의 시작으로 납읍리에서 추진한 마을 공동임대주택건립과 빈집정비방식이 학교 살리기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Table 1. Process of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시기	내용
1992~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의 역량으로 추진 정부지원은 제도화되지 않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사업으로 시작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건립 지원 기준 등 마련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전환
2013년 신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방식 전환 후 지원기준 - 대상: 60명이하 소규모학교의 학구에 포함된 마을 - 공동주택: 최대5억(보조50%, 자부담50%) 공동주택 규모 : 세대당 국민주택(85㎡)이하 - 빈집정비: 마을당 16가구 이내에 최대1억(보조70%, 자부담30%, 가구당 최대6백만원) 입주대상세대: 반드시 초등학교학생 포함
2014.0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5.0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개정공포 - 사업주체(행정시)의 일원화
2015.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1.15. 시행) - 6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관리대상 폐지 -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로 지원하여 ‘16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지원대상 확대 건의(※2017년부터 적용)
2015년 신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소재 마을 빈집정비 지원규모 확대 : 가구당 최대10백만원(보조70%, 자부담30%) ※ 공동주택 : 2015년 지원과 동일
2016년 신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학교 확대(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 구역 마을) - 32개교→67개교 공동주택 지원규모 확대: 최대6억(보조60%, 자부담40%) ※ 빈집정비 지원 : 2015년 신청과 동일

제주도교육청이 2011년 9월, ‘2012~2016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역대 통폐합규모 가운데 가장 많은 17개교와 2개 분교가 통폐합대상이 되었다.¹³⁾ 제주도교육청의 이러한 계획은 소규모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폐교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해체 및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켜,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 또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제주연대’ 등과 같은 조직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시켰으며, 마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폐교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제적이고

12) 납읍초등학교 행정실 자료제공

13) 김선필·정영신, 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쟁과 공공성의 재구성, 탐라문화, 43, 2013, pp.229-263

7) 박계식,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소규모학교 발전 가능성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론, 2007
 8) 임선빈, 학교역할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론, 2015
 9) 최중성,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론, 2014
 10) 노화동·정석, 농촌마을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제주특별자치도 8개 마을의 임대주택 제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3), 2015, pp.45-54
 11) 당시 분교장 격하 대상 학생 수는 100명 미만. 1993년에 60명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미 마을에서 추진하여 폐교를 극복한 사례가 있는 마을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제주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더덕초가 소재한 하가리 마을 공동임대주택과 2012년 납읍리의 「금산학교마을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공론화되었다. 2012년 뉴스제주에 의하면,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납읍초와 더덕분교장이 위치한 애월 납읍리와 하가리에 지원을 하였지만 별도의 지원 기준법령은 있는 것이 아니며,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지원요청을 할 경우 보조금 조례에 따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공이익의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¹⁴⁾ 즉 이 시기 지자체의 지원은 마을의 노력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와 같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2012년 말에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다세대주택 건립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13년부터 본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방식의 사업 형태가 채택되었다. 2013년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신청 공고에는 지원대상 마을, 지원기준, 공모규모, 신청자격 등의 기준과 절차가 제시되었으며, 임대용 공동주택과 빈집정비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었다. 당시 공동주택 건립 지원액은 최대 5억원으로 이는 2012년 건립된 납읍리의 「금산학교마을 공동주택」이 기준이 되었다.¹⁵⁾ 이후 학교규모, 지원내용 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2013년의 기준이 토대가 되고 있다.

3.2 관련조례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에 대한 관련조례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2014년 3월 18일 제정)이다.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마을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2015년 7월 2일 개정공포)로서 사업실행 주체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본 사업을 도에서 공모, 심사 및 선정을 하고, 행정시에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시행하는 이원화된 업무방식이었다. 그러나 공모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사업전반을 행정시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 및 숙원사업을 적절히 반영하고 행정시의 권한강화에 기여하며 행정시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¹⁶⁾ 지원에 관한 조례」(2015년 12월 30일 개정, 2016년 1월 25일 시행)이다. 작은학교의 기준이 60명에서 100명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지원사업의 대

상마을이 확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의 수도 32개교에서 67개교로 증가되었고, 지원 가능한 마을도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2019년도 신청기준을 보면, 2018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으로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년 이하인 초·중학교가 소재한 통학 구역 마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¹⁷⁾

3.3 지원범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사업으로 2017년부터 동일한 기준인 2019년 신청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경우 건축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으나 최대 6억원 범위 이내이며, 빈집정비 사업에서는 가구당 보조액 최대 10백만원 및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기구의 장 (리장, 마을회장)이며 공동주택 건립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가 필수이며,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동의 및 자부담금 확보를 필수로 정하고 있다.

Table 2. Application notice in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n 2019

구분	임대용 공동주택	빈집정비
지원금	건축물 당 최대 6억원	마을당 최대 1억원 가구당 최대 10백만원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보조 70%, 자부담 30%
규모	세대(가구)당 국민주택(85㎡)이하	-
입주대상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의	초·중등학생 포함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동일사업으로 보조금(마을당 6억원 한도)을 받았거나, 받기로 계획된 마을	해당 주택소유자의 직계존(비)속

3.4 소규모학교 살리기운동의 변화내용

1992년부터 마을에서 시작한 학교살리기운동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현재까지의 변화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Change of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구분	2013년 신청기준	2019년 신청기준
사업관여 기관	개별마을	정부지원
지원대상	60명	100명 또는 6학년 이하
지원 규모	공동임대 주택	사업비 : 최대 5억 보조율 : 50%
	빈집정비	사업비 : 최대 6억 보조율 ; 60%
		최대 6백만원 최대 10백만원
제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17) 해당학교는 총 63개교로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9개교로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6개교, 서귀포 소재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3개교이다.

14) 뉴스제주, 제주도,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있다, 2012.10.30.기사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607>)

15)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신청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3-711호), 2013년 6월 공고

16)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년(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개정 2015.12.30.).

첫째는 학교 살리기운동이 개별마을에서 시작되어 정부 지원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농촌관련 사업들이 주민 참여 또는 상향식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학교 살리기운동은 주민 스스로 시작하여 결국 지자체에서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가 마을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참여할 때 사업의 효과와 힘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2019년에는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로 확대되었다. 대상학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이 증가되어,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기 직전에 학교 살리기운동을 펼치는 것은 마을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위기가 더 고조되고 단기간에 해결해야 하는 압박감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가장 먼저 학교 살리기운동을 추진한 남읍리에서도 「분교장 격하」위기를 경험한 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표를 마을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공고에서는 「농어촌지역」으로 신청지역을 일정정도 한정하였으나, 인구감소의 현상이 전 지역으로 확대 되면서 도시 주변부에서도 이를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동지역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 주변 마을에서도 본 사업의 지원으로 학교 살리기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셋째 지원규모가 확대되었다. 임대용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 보조금 최대 5억에서 6억, 보조율은 50%에서 60%로, 빈집정비의 경우는 가구당 최대 6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제도가 체계화되었다.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이 학교가 아니라 마을지원, 사업 실행의 일원화, 그리고 대상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이 보다 안정화되었다.

4. 마을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 현황

4.1 추진현황

학교살리기를 위하여 마을에서 진행하는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현황을 보면(Table 4), 대부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가 대상이 된 경우가 1사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일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된 대상학교는 총 30개교(동일부지에 존재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로 집계)로 나타났다.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모두가 진행되는 학교가 17개교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임대주택사업만 진행되는 경우는 7개교, 빈집정비사업만 진행되는 경우는 6개교로 나타났다. 총 36개 마을이 학교 살리기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임

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마을은 15개로 나타났다. 공동임대주택사업만 진행되는 마을이 7개인 반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은 12개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마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빈집정비사업의 경우는 해당 학교 통학거리에 소재하는 마을 내의 개별주택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학교에 대하여 복수의 마을에서 복수의 주택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대상학교의 위치를 살펴보면(Fig. 2), 서귀포시 동지역에 소재한 2개교를 제외하여 모두 읍면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동지역에 위치한 2개교는 서귀포시 외곽에 소재하고 있어 시단위 주변부에서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Project types of implementation villages and schools

사업유형	학교 수	마을 수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모두 진행	17	15
공동임대주택사업만 진행	7	9
빈집정비사업만 진행	6	12
합계	30	36

*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일부지에 위치한 경우 하나로 집계



Fig. 2. Schools location targeted the project in Jeju-do

4.2 마을 공동임대주택

(1) 건물개요 및 세대수

마을 공동임대주택사업은 24개교를 대상으로 24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2사례 있으나, 이미 규모가 결정되고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포함하여 집계하면 37건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마을에서 2회 이상 추진된 경우가 10개 마을로서 학교살리기운동을 일찍 시작한 마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규모를 보면, 건물은 1동에서 4동까지 건립되고 있으며, 24개 마을에 총 52동이 건립되었다. 1동이 건립된 경우가 가장 많은 28건, 2동은 6건, 3동은 1건, 4동은 2건으로 나타났다. 건물 층수는 단층에서 4층이며, 주로 2층과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세대 수는 총 319세대로 2세대부터 29세대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8.6세대이나 편차가 심하다. 20세대 이상인 경우도 3건

으로 나타났다. 세대 당 면적은 2013년 결정된 기준인 국민주택 25평(85m²) 이하로, 18평, 20평, 25평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작은 규모는 8평이나, 이 마을의 경우는 마을민박사업을 위해 건립된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자 그 사업을 포기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학교살리기운동 차원에서 건립된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학교살리기운동 차원에서 건립된 경우, 가장 작은 면적은 1997년 건립된 남읍리의 공동임대주택의 13평으로 나타났다. 가장 넓은 면적은 30평으로 이 경우는

사업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립된 임대주택이다. 연도와 세대별 면적과의 상관관계가 .051로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면적이 다소 커지는 경향이 있다.

신축여부를 보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마을공동 소유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7건은 모두 신축에 해당하고 있다.

마을 공동임대주택은 학교살리기를 위해 대상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3월 학교 개학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Table 5. Status in project of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according to schools and villages

연번	지역	마을명	학교명	준공(거주) 연도	동수 (층수)	세대수	세대면적 (평)	신축여부	재원성격	비고
1		남읍리	남읍초	1997	2(2, 3)	19	13	○	◎	- 1차(다가구주택건립), 다른 부지에 건립
				2001	2(3)	12	18	○	◎	2차(효도마을공동주택)
				2012	4(3)	24	18	○	♣	3차(금산학교마을), 최초학교부지
2	애월읍	봉성리	어도초	1999	1(3)	9	16	○	★	-'99년 어음분교장통합(12명 유입) -(봉성)문화주택 1, 2, 3차
				2004	1(3)	8	20	○	▣	
				2015	1(3)	12	22	○	♠	
3		수산리	물메초	2001	1(3)	12	17	○	◎	곰솔빌라
4		하가리	더덕초	2011	2(2)	10	25, 30	○	♣	초등학교 격상('18.03.01)
				2014	2(3)	10	25	○	♠	
5		곽지리	곽금초	2013	3(4)	24	24	○	♣	과물해변주택
6	한림읍	금악리	금악초	2009	1(1)	2	14	X	★	마을 정미소 리모델링
				2009	1(1)	3	16	X	★	농협비료창고 리모델링
7		귀덕1리	귀덕초	2018	1(2)	8	24	○	●	
8	한경면	저지리	저청초	2017	1(3)	9	18	○	●	
9	대정읍	무릉2리	무릉초·중	공사중	1(3)	6	25	○	●	준공예정('18년 12월 또는 '19년 1월)
10	안덕면	덕수리	덕수초	1998	1(2)	3	18	X	★	마을소유건물 리모델링
				1999	1(1)	3	18	X	★	마을소유건물 리모델링
11		서광동리	서광초	2015	1(2)	2	20	○	▣	마을소유건물 2층 임대(1층 상점)
12	서귀포시	도순동	도순초	2014	1(2)	6	13	X	◆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2017	1(2)	3	20	X	◆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13	남원읍	한남리	의귀초	2015	1(3)	4	20	○	▣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2018	1(1)	3	20	○	▣	연장에 따른 마을지원금
14		토산2리	토산초	2005	1(3)	5	8	X	◎	마을수익사업(임대민박) 포기건물
15	표선면	성읍1리	성읍초	2016	1(2)	3	15, 18	X	◆	민속마을복지회관 2층 리모델링
				2016	2(2)	8	20	○	●	
16		세화2리	가마초	2014	1(3)	6	20	○	◆	복지회관다가구주택
				2017	1(3)	9	15	○	●	
17		수산1리	수산초	2012	1(2)	4	19	X	◎	마을소유상가건물 2층 증축
				2013	1(4)	8	18	○	♠	동일부지에 연차적으로 건립
				2014	1(4)	8	18	○	♠	
18	성산읍	온평리	온평초	2014	1(2)	5	20, 25	X	◆	마을공동 쫄면방 리모델링
19		신산리	신산초	2015	1(3)	6	23	○	●	그등애빌
20		신평리	풍천초	2018	1(3)	6	23	○	●	
21		시흥리	시흥초	공사중	1(4)	8	25	○	●	준공예정('19년 6월)
22		송당리	송당초	2014	2(3, 4)	12	25	○	●	당오름빌
23	구좌읍	한동리	한동초	2015	1(2)	10	18, 22, 25	○	●	둔지빌
24		동북리	동북분교장	2017	4(3, 4)	29	20	○	▣	환경자원센터(쓰레기매립 및 활용)

* 연도 : 신축인 경우 준공연도, 리모델링의 경우 거주시작연도

록 시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서 선정된 연도, 공사가 시작된 시기 및 준공연도, 입주자의 거주 시작 연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 매해마다의 경향을 파악하기 보다는 지자체 지원 이전과 이후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마을임대주택 건립과 세대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Fig. 3),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한 2011년 이전에는 불규칙적으로 건립되는 반면 이후부터는 매해마다 건립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지원기준 및 공모방식이 체계적으로 결정된 2013년 이후, 건물이 준공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는 건립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2건을 제외하여 준공된 35건 중, 21건이 2013년 이후에 건립되었다.

세대 수를 보면, 현재 공사 중인 14세대를 제외한 총 305세대 중, 191세대가 2013년 이후이다. 즉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부터 임대주택 건립과 이에 따라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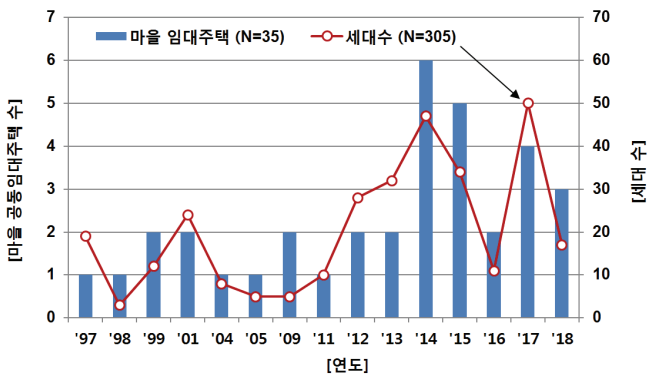


Fig. 3. The number of rental housing and household by year

(2) 마을 임대주택건립비용의 재원성격

마을 임대주택은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지자체에서 50%(변경 후 60%)를 지원할지라도 이것은 총 금액에 대한 절대적 지원비율이 아니라 최대 5억(변경 후 6억)이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 건립비용을 마을에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일찍부터 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마을에서 노력 할지라도 그 비용이 마련되기 전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이 된 후에도 건립비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가 되기도 한다.¹⁸⁾ 따라서 마을 공동임대주택의 건립은 마을자체만의 비용이나 지자체 지원만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여러가지 재원이 혼합되어 있다. 재원의 성격을 구분하면 (Table 6)과 같다.

건립비용의 주요재원을 마을자체에서 담당한 경우가 5사례 나타났다. 5건 모두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기 이전 시기이며, 4건은 마을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이다. 따라서 신축이 아니므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마을에서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인 경우는 1999년 봉성리의 어도초살리기 일환으로 건립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와 주변 기업들의 지

18) 서귀포시 하원동의 경우, 과거 탐라대학교의 부지활용에 대한 의견조율이 지연되면서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결국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원이 있었지만 주요 재원은 마을모금(출향민들의 지원 포함)으로 이루어졌다.

Table 6. Financial resources of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재원성격		시기	건수	범례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이전	마을기금이 주요 재원	2013년 이전	5	★
	지자체 지원금 ≥ 마을기금		5	⊙
	지자체 지원금 < 마을기금		3	♣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금 ≥ 자부담	2013년 이후	10	●
	지자체 지원금 < 자부담		4	♠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아님	기업지원	관계 없음	2	■
	환경자원 사용비 마을지급		3	▣
	마을의 타 사업비		5	◆
합계			37	

* 범례 : Table 5에서 재원성격

학교살리기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2011년부터는 이루어졌으나 사업기준 및 사업방식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시기는 2013년이다. 2013년 이전 건립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과 마을 부담액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지자체 지원금이 마을기금보다 많은 경우가 5사례, 역으로 마을기금이 더 많은 경우가 3사례로 나타났다. 2012년 건립된 남읍리 공동임대주택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2013년 이후, 본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후 건립된 공동임대주택의 재원성격을 보면, 지자체 지원금이 자부담금보다 많은 경우가 10사례로 나타나, 학교살리기운동 차원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비율이 2016년부터 60%로 상향조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선정된 마을에서는 모두 지자체 지원이 마을 부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3년 사업시행 이후의 마을 부담금이 더 많은 경우는 4개 마을이다.

공동임대주택 건립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마을에서도 최소 2억 5천만원, 많게는 10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모두의 논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살리기 활동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¹⁹⁾

시기와 관계없이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이 아닌 재원으로 마을 공동임대주택이 건립되는 경우가 10사례 나타났다. 먼저 마을주변의 기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2개 마을에서 나타났다. 마을에 쓰레기매립이나 활용을 위한 환경자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마을에 지급한 비용을 학교살리기 임대주택 건립비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3사례(2개 마을)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한남리에 건립된 임대주택으로 이 경우는 서귀포시가 남원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인 한남리마을회에 5억원을 지원하면서 건립된 것이다. 남원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매립용량 증설

19) 마라분교는 2015년에는 제주도교육청이 마라분교 학생유치를 위해 옛 마라분교장 건물을 주택으로 정비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임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3억여원 확보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산됐다.

에 따른 한남리마을회와 서귀포시와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된 비용을 학교살리기 임대주택 건립에 사용하였다. 한남리마을회가 학교살리기를 위한 마을숙원사업으로 서귀포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서귀포시는 ‘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동북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한 환경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마을과 협약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학교살리기 임대주택을 건립하였다.

읍면매립장 주변 주민과의 약속인 협약 지원 사업을 상호 협의를 통해 학교살리기운동의 일환인 마을 공동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그동안 기피해 온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외의 5개 마을에서는 본 사업이 아닌 마을에서 진행되는 타 사업으로 건립비용을 마련한 경우이다. 주로 마을소유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에 해당한다.

4.3 빈집정비 사업

빈집정비 사업현황을 보면, 27개 마을에서 총 135개 가구에서 210명의 학생이 유입되었으며, 대상학교는 23개교로 나타났다(Table 7).

마을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달리 빈집정비사업은 개별주택에 대한 지원이므로 하나의 마을에서도 2개 이상의 지원이 가능하며, 마을당 가장 적게는 1개 주택에서 16개 주택까지 나타났다. 가장 많은 16개 주택이 지원받은 마을은 신례1리로서 이 마을은 마을 공동임대주택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빈집정비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이 지자체 시행사업으로 시작된 2011년 기점으로 살펴보면(Fig. 4), 2011년에는 실제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없으나, 2012년부터는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살리기를 위해서는 빈집정비사업보다 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되

Table 7. Status in project of vacant housing remodeling according to schools and villages

연번	읍·면 지역	마을명	학교명	‘10년 이전		‘11년 이후								비고	
				시작 연도	가구 수 (학생 수)	가구 수(학생 수)									
						‘12	‘13	‘14	‘15	‘16	‘17	‘18	합계		
1	에월읍	남읍리	남읍초	‘92	11(16)										
2		봉성리	어도초	‘97	15(28)										
3		하가리	더덕초	‘10	2(4)										
4	한림읍	금악리	금악초	‘09	2(3)										
5	환경면	저지리	저청초						2(5)		2(3)		4(8)		
6	안덕면	덕수리	덕수초	‘99	5(6)		3(7)	2(2)					5(9)		
7		서광리	서광초	‘10	3(3)										
8		창천리	창천초				1(2)		1(2)				2(4)		
9		상장리							1(2)				1(2)		
10	구좌읍	송당리	송당초	‘99	2(2)										
11	서귀포시	하원동	하원초				3(3)	3(3)	1(1)	1(2)			8(9)		
12	서귀포시	도순동	도순초				1(2)	1(3)					2(5)		
13	남원읍	신례1리	신례초			7(15)	9(17)						16(32)		
14		의귀리	의귀초				1(3)	3(0)	2(2)				6(5)		
15		신흥1리	홍산초				1(1)	2(2)					3(3)		
16		신흥2리							1(2)				1(2)		
17			하례리	하례초				3(0)	5(7)				1(-)	9(7)	‘18년도 유치부 아동부모 계약
18	표선면	토산2리	토산초	‘10	8(16)		1(2)	1(2)				1(2)	3(6)		
19		세화2리	가마초	‘05	5(6)		2(2)	1(1)		1(1)			4(4)		
20	성산읍	수산1리	수산초			1(1)	2(4)						3(5)		
21		온평리	온평초					2(2)					2(2)		
22		신산리	신산초				2(1)				1(3)		3(4)		
23		단산리						1(2)					1(2)		
24		신천리	풍천초					1(3)							
25		신평리					2(4)	1(2)					3(6)		
26		시흥리		시흥초					1(2)	3(4)				4(6)	
27	구좌읍	종달리	종달초					1(2)					1(2)		
합계					53(84)	8(16)	19(39)	19(16)	24(37)	5(7)	5(9)	2(2)	82(126)		

고 있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공동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마을부담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사업이 제도화되면서 마을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을 시작한 마을이 증가하였다.

빈집정비사업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면서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자부담금이 요구되고, 마을 공동임대주택 기금마련에도 함께 동참해야 하므로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한 개별주택에서는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금이 마련된 마을에서는 빈집정비 보다 공동임대주택 사업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2016년 이후 빈집지원사업 지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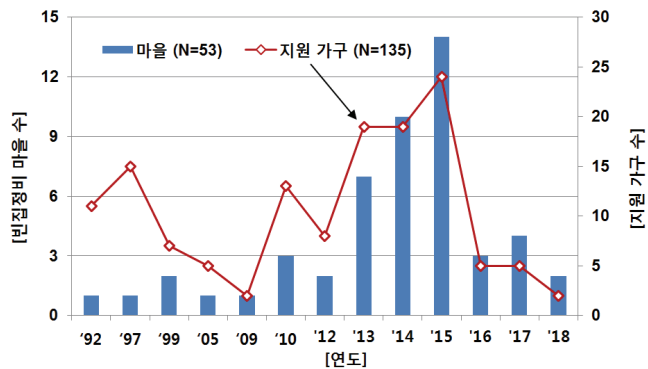


Fig. 4. The number of vacant housing remodeling and household by year

2011년 이전까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학교살리기운동을 전개 하면서 빈집정비사업은 개인 소유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집정비를 통하여 학생 유치율 가장 먼저 시작한 마을은 공동임대주택을 시작한 애월읍 남읍리이다. 1991학년도부터 「분교장 격하 대상 학교」로 통보를 받으면서 남읍리에 연고(緣故)가 없는 외지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바깥채나 빈집을 마을 자금 3천여만원(가구당 평균 3백만원)으로 수리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었다.

2011년 이전 빈집정비사업이 이루어진 마을들은 공동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빈집정비를 통한 학생 유치활동을 우선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동임대주택은 비용부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 전체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학교살리기를 추진하는 마을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으로 보아진다.

지자체 지원 이전과 이후의 빈집정비사업의 차이를 보면, 지자체 지원 이전에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바깥채를 정비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지원 이후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소유자와 동일 부지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4.4. 마을 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효과

마을 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학교살리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30개교(무릉중학교 제외)의 학생 수 변화를 파악하였다. 학교살리기사업을 일찍 시작한

경우는 1992년부터이지만,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생 수 변화를 파악하였다. 학생 수는 전체 30개교, 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둘 다 추진하는 마을의 17개교, 공동임대사업만 추진하는 마을의 7개교, 빈집정비사업만 추진하는 마을의 6개교로 구분하여 평균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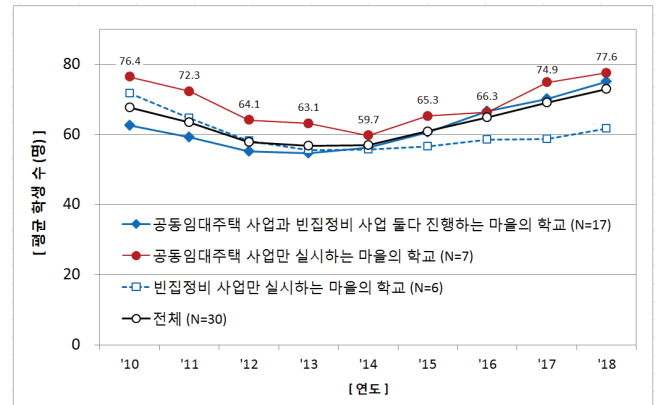


Fig. 5. Change of the number of students from 2010 to 2018

전체적으로 2013년과 2014년에 평균 학생 수가 가장 감소하였으며, 201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개교의 전체 평균 학생 수는 2013년 56.8명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73명이 되었다.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에 따른 동향을 보면, 마을 임대주택사업만을 추진하는 7개교의 평균 학생 수가 연도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균 학생 수가 낮게 나타난 유형은 2013년을 기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둘 다 추진하는 마을의 17개교의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낮았으나, 2013년 이후에는 빈집정비사업만 추진하는 마을의 6개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개의 사업 모두 빈집정비사업이 포함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평균 학생 수가 지자체에서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에 16.2명이 증가하였고, 임대주택만 추진하는 마을의 7개교의 경우는 2013년 59.7명에서 2018년 77.6명으로 17.9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마을 공동임대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학교살리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건립사업이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11년과 2014년 마을 공동임대주택 20세대를 건립한 애월읍 더럭초교는 2018년에 분교에서 초등학교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성과라 판단된다. 노화동 외 1인의 연구에서도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이 학교 살리기에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²⁰⁾

20) 노화동·정성, 농촌마을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의 역할-제주특별자치도 8개 마을의 임대주택 제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3), 2015, pp.45-54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학생을 유입했다는 결론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운동을 하고,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마을주민 전체의 노력과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살리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제주도 내에서 일찍부터 추진하여 온 학교살리기운동은 학생 수의 감소를 예견하여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참여하여 만들어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시행하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 마을 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현황, 그리고 사업추진 마을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 수 변화를 조사하여, 이러한 유형의 사업이 학교살리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살리기운동은 개별마을에서 시작되어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제도화되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살리기를 위하여 빈집을 정비한 후 임대하는 사업이 1992년 시작되어,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한 2013년까지 약 2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과 제도화는 학생 수의 감소를 예견하여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참여하여 만들어낸 20여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임대주택 건립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모두의 주도적인 참여와 합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 살리기활동에 성공한 마을은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을 공동임대주택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빈집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동임대주택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적 부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마을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유입하여 마을 자체의 인구를 증가시켜 학교살리기를 추진하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 소재한 30개교의 평균 학생 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학교살리기를 위한 임대주택건립사업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타사업으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행정기관마다 이에 대한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주체를 일원화한 것처럼 관리의 측면에서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받은 후에 입주자를 거부하거나 여전히 빈집으로 두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승계임대자를 블로거 등의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 구하는 사례가 있다. 수요자와 공급

자를 매칭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부재, 미흡, 부정확성이 발생되고 있다.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낯선 마을에서 거주를 시작하는 외지인의 입장에서 공통된 현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거의 마련되고 있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마을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졸업을 하면 임대주택을 떠나야 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귀농·귀촌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살리기활동과 결합한 방안을 모색하여 농촌인구의 증가와 학교살리기운동 모두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살리기운동이 마을 자체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여 길게는 20여년,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된 지는 7여년 정도가 경과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외지인이 정착한 비율과 마을을 떠난 사람의 비율, 그리고 정착하거나 떠나는 이유 등을 냉철하게 검토하여, 농촌지역의 학교살리기활동이 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인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박계식,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참여를 통한 소규모학교 발전 가능성 모색,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론, 2007
2. 임선빈, 학교역할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론, 2015
3. 최종성,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론, 2014
4. 김선필·정영신, 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쟁과 공공성의 재구성, 탐라문화, 43, 2013
5. 김승근·신주성, 공공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공원화 사업과 외부공간조성 -청주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 논문집, 17(4), 2010
6. 김승제, 학교시설과 지역시설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복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4), 2006
7. 노화동·정석, 농촌마을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제주특별자치도 8개 마을의 임대주택 제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3), 2015
8. 박삼철, 극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대안 탐색: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4), 2012
9. 방택훈·김기환, 학교시설 다목적강당의 지역주민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시내 초중고교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3), 2006
10. 변경화, 폐교를 활용한 체험활동 숙박시설의 공간계획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5), 2015
11. 서희숙·이상홍,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현황에 관한 기초

적 연구-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
지, 13(3), 2006

12. 이화룡, 학교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지, 15(1), 2008

13. 뉴스제주, 제주도,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있다, 2012.10.30
뉴스기사

접 수 일 자 : 2018. 10. 21

게재확정일자 : 2018. 11. 09